

민주 ‘1인1표제’ 당헌 개정 의결… 다음달 2일 재투표

당 대표·최고위원 선거 대의원 가중치 폐지…비당권파 반발
22~24일 권리당원 여론조사…2~3일 중앙위 투표로 확정

더불어민주당 정태래 대표가 추진하는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당헌 개정이 19일 당무위원회 회를 통과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무위가 끝나고 취재진에게 "당헌 개정을 위한 중앙위원회 안전 부의의 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당무위원 79명 중 현장 참석자 16명을 포함해 61명이 표결에 참여했고, 이 중 2명이 서면으로 반대표를 던졌다.

1인1표제는 당 대표·최고위원 선거 시 적용하던 '대의원 가중치'를 폐지하는 제도다. 지난달 초 도입을 추진했으나 중앙위 투표 부결로 좌초됐다.

개정안은 오는 22~24일 권리당원 여론조사를 거쳐 다음 달 2~3일 중앙위 투표를 통해 확정된다.

당 대표 선출을 위해 예비경선을 할 경우 권리당원의 투표 반영 비율을 대폭 늘리는 내용 등을 담은 당규 개정안도 이날 당무위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중앙위원급 투표 반영 비율은 35%로 15%포인트(p) 줄어들었고, 권리당원과 국민 여론조사 투표 반영 비율은 35%와 30%로 각각 10%p, 5%p씩 상향 조정됐다.

당규는 최고위원회와 당무위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하지만, 당내 반발도 거세다.

비당권파인 황명선 최고위원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회의에서 "1인1표제를 도입하되 다음 전당대회 이후에 적용하는 것으로 당헌·당규를 개정하면 된다"며 "의견 수렴 과정에서 당원에게 적용 시점과 절차에 대한 의견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최고위원은 "지난달 1인1표제가 부결됐던 의미도 결코 가볍게 넘겨선 안 된다"며 "당시 부결에 담긴 의미는 '원칙에 동의하지만 오해의 소지를 없애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최고위원 간 의견이 분분하고 활발한 것처럼 당원 간에도 당원 주권주의를 어

떻게 잘 구현할 것인가에 대해 속고와 토론이 굉장히 활발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반면 당권파로 분류되는 문정복 최고위원은 "1인1표제에 대해 총의가 모아졌고 이제 와서 다른 부차적 이유로 다시 문제로 삼는 것은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라며 "또 다른 제안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문 최고위원은 "차기 지도부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것은 또 다른 프레임과 문제를 만드는 일"이라며 "당이 일사불란하게 정리했던 내용을 실천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성운 최고위원도 "최고위원 보궐선거에서 1인1표제에 대해 모든 후보가 찬성했고 충분히 공론화됐다"며 "당원들의 요구에 따라 당원주권 정당으로 반드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그는 "김대중 대통령이 1987년 6월 항쟁 당시 직선제를 주장하자 대선에서 유리해지기 위한 정치적 주장이라는 비판이 나왔다"며 "하지만 국민은 대통령 직선제를 이뤄냈다"고 덧붙였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전날 비당권파를 겨냥해 "이런 논란을 촉발하는 것이 조금 더 가면 '해당 행위'라고 비난받아도 할 말 없는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다"고 발언하면서 계파 갈등 수위도 더욱 고조됐다.

앞서 '1인1표제의 차기 전대 적용 여부를 당원에게 묻자'고 요구한 강득구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출직 최고위원의 발언을 해당 행위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반박했다.

이어 "나 같은 사람한테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이라며 "박 수석대변인이 공개·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하고,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수요일 공개회의에서 제 입장을 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해당 행위 운운하면서 '입틀막'하는 것은 민주주의 정신을 저버리는 것"이라며 박 수석대변인을 비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태래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혜훈 청문회’ 후보 없이 자료 공방하다 파행

재정경제위 시작부터 언쟁…여 “개최해야” vs 야 “자료 미비” 대치

여야가 19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당초 여야가 합의한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시간에 맞춰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시작부터 서로 언쟁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후보자 없는 인사청문회가 어디 있느냐”며 이 후보자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청문회를 개최했다며 항의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인 임이자 재경위원장은 재적 위원 4분의 1 이상 요구가 있는 경우 개최해야 한다는 국회법을 거론하면서도 “양당 간사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기에 위원장으로서 청문회 안건을 상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여야는

15일 오후 5시까지 자료가 충실하게 안 오면 일정을 연기하겠다고 합의한 바 있다”며 “그런데 제출된 답변은 전체 15%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 등 다른 야당 의원들도 자료 제출 미흡과 후보자 태도를 문제 삼았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허술한 자료로 면죄부를 주는 청문회가 돼선 안 된다”고 지적하면서 이 후보자가 의혹을 제기한 자신을 향해 수사 의뢰를 언급하는 등 겁박했다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인사청문위원을 고발할 수 있다는 태도에 매우 유감”이라며 “자료 제출 건에 대해 민주당 위원님께서 노력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부족하다”고 동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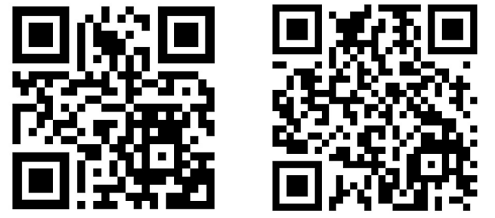
반면 여당 간사인 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간사와 협의도 없이 후보자를 앉히지도 않고 일정 조정에 관한 말씀을 하는 것은 청문회를 할 의지가 없

는 것”이라며 “국민을 대신해 후보를 검증해야 할 책무를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라고 맞섰다.

정 의원은 “우선 청문회를 시작하고 부족한 것은 채워나가도록 진행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청문회 개의를 요구했다.

여야 대치가 계속되자 임 위원장은 양당 간사에 청문회 개최 여부에 대해 추가 협의를 주문하면서 일단 정회를 선포했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유튜브에서 '이혜훈 청문회' 숏츠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QR 코드 촬영.

‘통일교 특검’ 평행선

민주 “통일교·신천지 종교 개입 통합해야”…국힘 “따로 특검”

여야는 19일 '통일교 특검'을 두고 재차 협상에 나섰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국회에서 회동했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치권 개입 의혹을 하나의 특검으로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통일교와 신천지 특검을 각각 발족해야 한다고 맞섰다.

한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종교와 정치 분리 원칙에 대한 특검인데 왜 따로 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며 “이 특검, 저 특검 하지 말고 하

나로 통합해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통일교 특검에 ‘민중기 특검’ (사건 은폐 의혹) 수사도 넣자고 하는 국민의힘 주장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라며 “전적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송 원내대표는 “두 가지를 같이 수사할 경우 우리당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될 우려가 있다”며 “2개의 별도 특검이 각각 진실을 규명하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의 ‘궁전 뇌물’과 관련해서도 특검을 주장했지만, (민주당이) 당장 수용할 생각이 없다는 취지로 얘기하고 있다”며 “조속히 특검 수사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김병기 의원 ‘자진 탈당’

민주당 제명 처분 일주일만에… ‘의총 표결 불가피’ 판단에 결단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19일 자진 탈당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에서 “제명당 하더라도 스스로 당을 떠나는 선택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 입장은 지금도 같다”며 자진 탈당에 선을 그었지만, 입장을 선화한 것으로 보인다.

김 원내대표의 입장 변화에는 자진 탈당을 하지 않을 경우 의원총회에서 제명에 대한 찬반 투표를 거쳐야만 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당헌·당규상 현직 의원에 대한 제명 처분은 의원총회에서 재적의원의 과반 찬성을 얻어

야 가능하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제명 처분을 한다면 최고위원회의 결정으로 종결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당에 요청하며 “굳이 의원총회 추진을 거치면서 선배, 동료, 후배 의원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마음의 부담을 지우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12일 회의에서 김 의원에 대한 각종 의혹과 관련,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제명을 의결했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6-중-166833호]

[광고]

허리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허리 디스크 협착증

미세현미경 수술
척추 내시경 수술
고주파 수핵 감압술
척추 유합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칼라강판 지붕공사

주택(외, 내부) 리모델링

옥상스틸방수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건물 리모델링

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

MD 모던건설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장 광주시 서구 서항2길3(서항동)